

문광부 '광주 문화수도' 축소 움직임

전당만 짓고 정부 손 때...우려 현실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아시아의 문화 '허브(hub)'를 목표로 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결국 문화전당 하나만을 짓고 마는 생색내기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여정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광주지역에서 제기됐던 문화중심도시 위기론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주요 업무현황' 자료는 사실상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한정하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담고 있다. 전당은 정부가 지어주겠지만 그보다 예산이 3배 이상 투입되는 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국가-지방간 '역할 분담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전당 완공 시기도 당초 예정된 2010년이 아니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후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지방간 역할분담 설정=문광부는 사업 초기부터 줄기차게 중앙정부

예산 2조 드는 도시조성 "광주시 알아서" 완공 시기도 "2010년부터..." 크게 늦춰

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해왔다.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 등은 정부가 책임 지겠지만 광주 도시에 대한 리모델링과 주변 도로 개선 등 도시조성 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문광부와 기획예산처가 잠정협의한 총 예산 2조 7천174억원 중 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7천억여원의 예산 외에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시가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결국 문광부는 국가적 사업인 문화전당만을 짓겠다는 계산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를 여러 권역으로 나눠 특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광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2조원에 달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도시조성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광부가 국가-지방간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문화전당만을 짓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광부의 계획은 광주시와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국비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도시조성사업을 시가 맡으라는 주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문화전당 완공 연기 및 규모 축소=문광부는 촉박한 사업 일정을 이유로 2010년 전면 완공기로 했던 계획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하거나 준공 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시민단체 등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만 큼 5·18민중항쟁 30주년에 맞춰 준공 하려면 당초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설계(완료 예정 2007년 2월)가 계획 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준공시점을 수개월 정도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단계적 완공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계적 완공은 핵심시설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변화나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업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계성 논리에 따라 건축 연면적을 4만3천172평에서 2천900평을 줄이려는 계획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 계획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전당 내 주차장을 약간 늘이는 대신 2~3천원을 확보하려면 외부 주차장 계획을 수정하려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전남개발현대 유동훈 사무처장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취심이 문화전당이라고 하면 최소한 문화전당은 계획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거물급 카드' 물 건너간 10·25 해남·진도 보선

막판 '후보군 압축' 진통

전윤철·임동원씨 영입 무산
우리·민주 '후보 찾기' 고심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이 막판 후보 선정에 나서고 있어 최종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거물급 후보라며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던 전윤철 감사원장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카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적합 후보 찾기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9일 공천심사위원회의를 개최, 후보자 선정 작업에 나선다. 18일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장흥·영암)은 "후보군은 많으나 지역 실정에 딱 맞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라며 "19일 열리는 공천심사위에서 어느 정도 후보군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영입 문제와 관련 "임 전 장관이 건강도 좋지 않은데도 고령이어서 나오겠느냐"며 "여기에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임동원 전 장관 카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출마 여부와 관련, 유선호 전남도당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색깔이 강한 사람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이어 "노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강조,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 다자구도가 형성되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참신하고 역동적인 능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일거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19일 공특위(공직후보자심사특위)를 열고 후보자 선정을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한다. 13명의 후보군이 몰린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5일에는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아직까지 전윤철 감사원장 카드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나 전 감사원장이 수차례 고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서 실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효석 원내대표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고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무산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조만간 전 감사원장을 직접 만나 최종 의사를 타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5일 해남·진도 보궐선거와 관련, 한화갑 대표와 최인기 전남도당 위원장, 이정철 전 의원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0일까지 해남·진도가 불모지이긴 하지만 호남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상품성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지릿수 지지율만 확보한다면 의미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내부 기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효숙 동의안' 野4당 합의 불발

한나라 중재안 거부...오늘 재회동
분회의 인준안 표결처리 불투명



18일 국회에서 야4당 원내대표들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길 민주노동당, 김형오 한나라당, 김효석 민주당,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일 국회 분회의에서 전 현 재소장 후보자의 인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날 민주당 김효석, 민노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법사위 청문회 개최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한나라당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 현 재소장 임명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당의 입장을 고수하며, 야3당 요구의 수용을 거부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그러나 야3당은 여야 합의처리 원칙 아래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하고 19일 재회동을 갖기로 했다. 다만 야3당은 19일 열리는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조 표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일부 야당이 여당과 함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담 직후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노력 종료 선언을 하고 각 당의 입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 투표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국민중심당은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분회의의 참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민노당은 야4당 원내대표 회담결과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우리당(141석)과 민노당(9명)이 공조하면 일단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149석)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서남해안 개발 특별법 시급 연내 국회상정 최대한 노력"



정찬용 前 인사수석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NGO 담당대사)은 18일 "서남해안 개발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남해안포럼 운영위원 자격으로 목포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서남해안 개발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업과 시설을 발굴해야 한다"며 "아직도 투자유치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 자본유치를 위한 제도마련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 전 수석은 특별법 추진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이 다른 법률과의 상충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연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중인 서남해안 레저관광도시조성(J 프로젝트) 사업과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시간적인 상충 우려에 대해 정 전 수석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그는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서남해안 지역은 국토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차원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국제자본 유치를 통한 민자 중심 발전전략에서 선 정부주도 전략 수립 후 국내의 민자 유치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중인 특별법에는 특별개발지역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특별지역 핵심지역 내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좋은 사람 좋은 여백 - 상주는 여백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주) K&K 유계영대표님 특선 드림!

축식 연유에 출발할 수 있는 여행지!!!

지역	면적	가격	특징
경북	300~500평	2,000,000 ~ 3,500,000	자연경관 우수, 교통 편리
충남	200~400평	1,500,000 ~ 2,800,000	농촌 체험, 전원 생활
충북	150~300평	1,200,000 ~ 2,200,000	산악 지형, 맑은 공기
전북	100~200평	800,000 ~ 1,500,000	평야 지대, 농업 관광
경남	50~100평	400,000 ~ 800,000	해안 지역, 관광 자원

상세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주) K&K 부동산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010-1234-5678